

# 서강·연세·외대 수능최저 '폐지'... 건국·이화는 '강화'

## 現 고2 대입 알아보니

진학사 2020 대입 대학분석 결과 서강대·성균관대, 정시선발 확대 수도권 대학 정시 1% 내외로 확대

현 중3 대상 2022학년도 대입 제도가 수능위주전형 확대에 예상되는 가운데, 그에 앞서 현 고2가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도 대학별 모집 비중과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의 변화가 적지 않다.

13일 진학사가 수도권 대학들의 2020학년도 대입 선발방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시모집 비중은 소폭 상승한 반면 수도권 주요 대학의 수능위주 정시 선발 비중은 다소 확대된다. 또 수시모집에서 수능성적을 보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역시 대학별 변화 폭이 적지 않다.

◆ 2020학년도 수시 선발 비중 상승, 수도권 주요대는 정시 비중 커져

2020학년도 수시모집 선발 비중은 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보신각에서 열린 제7회 대학합격기원 타종행사에서 수험생 가족들이 소원지를 매달고 있다. /연합뉴스

년도보다 소폭 상승한다. 하지만 인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 정시 비중이 다소 커졌다. 수도권 대학들은 주로 정시 선발 비중이 전년 대비 1% 내외 확대된다. 특히 서강대와 성균관대의 경우 정시 선발 비율이 올해보다 각각 10%, 13% 큰 폭 상승한다. 두 대학의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논술과 실기 전형 모집인원은 큰 폭으로 줄었지

만, 학생부종합전형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대학 진학을 위해 교과 성적 뿐 아니라, 수행평가, 동아리, 독서 등 교육 연계 활동이 중요하다.

◆ 수시 수능최저 약화, 서강·연세·외대 수능최저 폐지

수시모집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지속 약화되는 추세다. 서강대 학생부종합전형(학업형),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활동

우수형, 논술전형), 한국외대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아예 폐지한다.

서강대의 경우 그동안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높고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수능 이후 제출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자가 많았다. 수능 점수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어서 최상위권 학생 위주로 전략적으로 지원한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될 경우 학생들의 지원심리가 더 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세대 논술전형의 경우도 수능영어 절대평가 이후 모든 수능 과목을 수능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해 매우 높은 기준이 요구됐었다. 또 논술 일정을 수능 이후로 변경해 성균관대와 일정이 겹쳤지만, 2018학년도 입시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2020학년도엔 연세대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 기준 폐지와 성균관대 논술 선발 정원 대폭 축소를 고려하면 지원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 건국·이화여대는 수능최저학력기준 강화 반면 건국대와 이화여대 등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높였다. 건국대 논술전형의 경우 그동안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치르고,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올해(2019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고사 일정을 수능 이후로 변경했고, 2020학년도에는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새로 적용한다.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다소 높아진다. 같은 전형 내 타 모집단위가 탐구영역을 2개 영역 평균을 사용하던 것에서 1개 영역만 사용해 그 기준을 낮춘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해석된다.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전형을 살필 때 단순히 2020학년도 전형만 보지 말고, 그 전년도와의 전형 방식과의 차이를 비교해, 학생들의 지원심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 “단국대서 수도권 29개 대 진학상담 받으세요”

단국대학교는 오는 18일 오후 1시~5시 까지 죽전캠퍼스 체육관에서 '제8회 고교생을 위한 DKU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단국대를 비롯해 한양대, 아주대 등 수도권 29개 대학이 참여해 '진로탐색 및 대입전형준비전략'을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국대 관계자는 "대학 입학사정관과 입학 관계자가 서류 컨설팅 등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방법을 알려주고, 학과 교육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전공 선택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 참가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경기대, 광운대, 한경대, 국민대, 단국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



단국대학교는 수도권 29개 대학이 참가하는 '제8회 고교생을 위한 DKU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 /단국대

대, 명지대, 상명대(서울), 서울여대, 성결대, 성공회대, 수원대, 숭실대, 아주대, 안양대, 용인대, 을지대, 인하대, 평택대, 한국산기대, 한국외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에리카)(대학명 가나다 순) 등 29개교다.

### 한성대 융합기초프로젝트 '해카톤'

한성대(총장 이상한)는 지난 10일~11일 이틀간 교내 상상관 체육관에서 제9회 융합기초프로젝트 '해카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카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해킹하거나 개발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한성대 재학생 14명을 비롯해 성균관대와 서울

과학기술대 재학생 등 69명이 모여 무박 2일 합숙을 하며 '행복한 우리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고차원적 학습 경험과 도전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 디자인 사고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됐고, 오리엔테이션과 융합적 주제 발굴 기간, 아이디어 공유회 등에 이어 무박 2일간 해카톤 등 6단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지역 사회 문제 탐색과 문제 해결에 나섰다.

### 연세대 문명재 교수 '디지털분야' 100인 선정

연세대학교는 행정학과 문명재(사진) 교수가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적 공공부문 글로벌 네트워크 에이폴리티컬(Apolitical)이 선정한 '2018년 디지털정부(Digital Government)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100 Most Influential People in Digital Government)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에이폴리티컬 발표 내용에 따르면, 문교수는 사회 과학 분야 전자정부 관련 논문 증가율, '전자정부 진화에 대한 논문(Google Scholar Citation, 약 2200회)'을 발표했으며, 꾸준히 관련 분야를 연구하면서 전자정부 관련 국제컨설팅과 교육훈련을 해온 공헌을 인정받았다. /한용수 기자

## 기업 10곳 중 7곳 “비정규직 → 정규직 계획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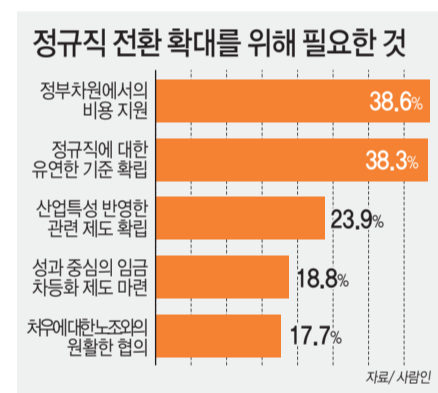
사람인 기업 368개사 설문조사 “전환시 동일한 처우 제공” 85.5%

기업 10곳 중 약 7곳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사람인이 기업 36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31일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을 고용한 기업 158개사 중 69.6%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정규직 전환 비율은 전체 비정규직 직원 대비 51% 수준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24.5%), '10% 미만'(17.3%), '90%'(14.5%), '100%'(10%), '70%'(6.4%), '20%'(6.4%) 등의 순이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한다는 응답이 85.5%로 별도 처우 규정을 마련



한다는 응답(14.5%)보다 월등히 많았다.

반면, 전환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 48개사는 그 이유(복수응답)로 '인건비 상승 부담 때문에'(41.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업무량이 유동적이라서'(37.5%),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16.7%), '최근 경영성과가 좋지 않아서'(12.5%), '신규채용에 지장을 받아서'(8.3%) 등의 이유를 들었다.

특히 비정규직을 고용하던 업무에 신

규로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5.7%)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업무 지속성 향상을 위해서'(58%),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해서'(50%),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39.8%),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22.7%) 등을 들었다.

기존 비정규직 직무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분야(복수응답)로는 '제조/생산'(19.3%)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18.2%), '재무/회계'(17%), '인사/총무'(17%) 등의 순이었다.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복수응답)으로는 '정부차원에서의 비용 지원'(38.6%)과 '정규직에 대한 유연한 기준 확립'(38.3%)이 1, 2위에 올랐다. 이어 '산업특성 반영한 관련 제도 확립'(23.9%), '성과 중심의 임금 차등화 제도 마련'(18.8%), '처우에 대한 노조의 원활한 협의'(17.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한용수 기자

### 6개 교육시민단체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운영 불공정” 감사 청구

교육관련 시민단체 6곳이 13일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를 진행해 온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열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심각한 불공정 운영과 결과 발표의 왜곡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대입제도가 확정되면 이는 원천 무효에 해당하에 대한 시시비비를 감사원에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론화 결과, '수능 위주 전형 45%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1안과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안에 대한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의 설문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

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권고하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장기적 과제로 해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수능 절대평가 확대와 수능 위주 전형 축소를 주장해 왔다.

한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중3대상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개편안은 지난 7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권고안을 그대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은 현재보다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고, 수능 평가방식은 현재처럼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로,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로 하되,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용수 기자

### 시원스쿨 기업별 외국어 강의 서비스

외국어 교육 전문기업 시원스쿨(대표 양홍길)이 기업 전용 B2B 사이트 구축과 기업출강 등 기업 전용 외국어 강의 솔루션을 도입해 서비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외국어를 배우려는 직장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로 바쁜 직장인들의 손쉽게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원스쿨은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와 규모, 직원 특성 등을 고려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후 기업별 맞춤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외국어 교육이 필요한 직원 수가 적을 경우 기업단체 수강 서비스를 통해 할인된 비용으로 강의 콘텐츠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다. 직원수가 많은 기업의 경우 별도 기업 교육 사이트를 구축한다. /한용수 기자